

경제자료

북한 핵실험: 인접 국가와 국제사회의 영향

본 자료는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실시 이후인 10월 12일 몬트레이 국제학대학원 비확산연구소(CNS)와 동아시아 연구소(CEAS)가 주관한 “북한 핵실험: 인접 국가와 국제사회의 영향(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Regional and International Implications)” 제하의 패널토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본 패널토의는 Clay Moltz 박사(CNS)의 진행으로 Tsuneo Akaha 박사(CEAS), Daniel Pinkston 박사(CNS), Jing-dong Yuan 박사(CNS)가 참여하였으며, 패널토의의 주요 내용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각 나라들의 반응과 대응조치에 관한 것이었다.

Akaha 박사는 일본이 북한 핵실험 이전부터 일본인 납치문제와 미사일문제로 인해 이미 대북 제재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은 핵무기확산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Yuan 박사는 중국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심한 분노를 표현하였으나, 군사적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에 대한 식품과 에너지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inkston 박사는 경제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대북제재가 최근의 긴장 고조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을 수 있다고 밝혔다.

패널토의에 참가한 발표자들은 핵실험의 심각한 반향을 강조하면서 핵무기를 도입하거나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의해 야기되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단기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반향이 아니라 중동 국가들의 반응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란도 역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것은 이 지역에 불안감을 야기하고 핵무기와 핵기술에 대한 요구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 다른 국가에 핵무기나 핵물질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토론자들은 밝히고 있다.

* 자료원: http://cns.miis.edu/pubs/week/pdf/061016_dprk_forum_report.pdf

일본의 반응과 견해

Akaha 박사는 일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대북제재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고, 이것은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과거 일본인 납치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대북제재정책은 일본사회와 여야 위원들이 북한에 대해 일반적으로 느끼는 불신을 반영한 것이며, 북한에 대한 불신은 고이즈미 내각에서 아베 신조 내각으로 바뀔 때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고이즈미 전 내각은 2002년 9월 처음으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실시하였고, 양측은 납치문제, 수교문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쉽게 북한과 대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북일 관계에 있어서 두드러진 변화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즉각적으로 비난하였으며, UN 헌장 7장 결의안의 채택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UN 헌장 7장 결의안의 채택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행동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2003년 미국이 국제사회를 이끌고 이라크를 공격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패널토의에서는 일본이 UN 헌장 7장 결의안에 따른 군사적 행동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Akaha 박사는 일본정부가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에는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사용은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하였다. 물리적 분쟁에 따른 영향은 일본에게 충격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남한과 중국은 대량 난민 발생에 직면할 것이며, 일본 역시 비슷한 혼잡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추정에 따르면 전쟁 발발 시 순식간에 1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며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핵무기 사용 없이도 이산가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본정부는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 Akaha 박사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아니다'라고 대답했고, 북한의 핵실험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아베 총리는 일본은 비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Akaha 박사는 아베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다. 아베총리는 이전부터 일본의 핵개발이 비합법적이지 않다고 말해왔다. 일본이 핵을 개발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며, 만약 핵을 개발한다면 일본은 NPT를 탈퇴해야 한다. 일본은 그동안 NPT 와 다른 법적인 장애물들에 의해 제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의 핵탄두가 일본열도로 향할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Akaha 박사는 미일안전보장조약과 핵우산은 일본의 핵무장 야망

으로 먼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결국 일본의 핵 개발 진행은 정치, 안보적 계산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

Yuan 박사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중국정부가 강력한 반대와 비난의 뜻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였다. 중국정부는 이번 핵실험에 대해 분노하였으며 북한의 행동에 대해 “중국의 뺨을 치다”라고 표현하였고, 이것은 중국정부가 북한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의문을 가질 만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중국의 영향력 약화는 2006년 7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중지를 경고했으나 북한이 바로 다음날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에서도 이미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또 북한은 7월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평양에 중국 공산당원을 보내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견을 거절하였다. 이에 중국 당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지지약속을 철회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Yuan 박사는 이에 관한 것은 중국정부에서도 논쟁중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에 있어 심사숙고하였다. 반면 핵실험 이후에는 평양의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더욱이 중국이 발표한 성명의 어조는 이전보다 심각한 것으로 ‘철폐(brazen)’ 같은 단어를 포함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Yuan 박사는 미국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은 북한 핵무기의 타겟(target)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큰 잠재적 문제는 나머지 지역들, 즉 남한, 일본, 타이완의 핵무기 보유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제재조치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는 없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식품과 에너지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보였다. 중국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은 그러한 공급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되며, 북한체제와 군은 멀리 가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은 870마일(1,391Km)인데, 이는 유입되는 거대규모의 난민을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길어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붕괴와 불안정한 상황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제재와 북한 핵실험 관계

Pinkston 박사는 최근 미국의 행동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첫째, 그는 2005년 9월 발표된 9·19 공동성명

이 이전에 합의했던 협약(framework)에 비해 의미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모든 합의사항은 '해석의 문제'를 소지하고 있어, 종종 심각한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1994년 체결된 북미기본합의서 이행에 있어서 자신들이 의무를 수행하길 원한다면 미국은 경수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경수로를 얻는 것은 오직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의 탈퇴를 철회하고 이 조약의 확산방지의무를 완전히 응낙하게 된 이후에나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 국무성이 베이징에서 9·19 공동성명서의 조항들에 대해 협상하는 동안 불법 행위방지구상(Illicit Activities Initiative)은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정책을 실행하였다. 이는 두 가지 법적인 기반에 기초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품목의 확산, 그리고 이러한 확산을 지원하는 실체들을 제재하는 것을 허용하는 실행명령 제13382번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를 중단시킨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애국가법(Patriot Act)이다.

또한 불법행위방지구상(Illicit Activities Initiative)은 북한의 화폐 위조, 마약 거래 및 다른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례로 2005년 9월 15일 미국정부는 북한의 불법 자금망과 연계된 것으로 드러난 마카오 델타 아시아은행을 돈세탁 우선 우려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북한과 아무런 경제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기업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위협은 북한의 국제 경제업무를 마비시키는 영향을 미친다. 이들 제재들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북한 기업들과의 교역을 단념하도록 하여 북한의 불법적인 교역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교역도 억제하게 할 것이다.

Pinkston 박사는 이러한 제재가 최근의 긴장 고조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목조르기는 김정일이 지지자들로부터 충성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금에 대한 접근 경로를 제거함으로써 김정일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로 김정일은 자신의 힘을 증명할 필요를 느꼈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2006년 7월의 미사일 실험과 최근의 핵실험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이러한 행위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 실험들은 강제적인 조치만으로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기도 한다.

북한의 성명서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방콕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아니다. 핵실험 발표 이틀 후인

10월 11일에 북한 외무성은 북한 정부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번 실험은 9·19 공동성명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정부의 반응

핵실험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을 살펴봄에 있어서, Pinkston 박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대북정책은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으로부터 매우 비판받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노 대통령은 남북경협을 중단하라는 중대한 압력을 받고 있으나, 이 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은 계속될 것임을 선언하였다.

한국정부는 한미 군사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해 움직였으며,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일정을 잡았는데 여기에서는 핵 확산방지와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반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중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Pinkston 박사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의 UN 사무총장 선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다수의 전문가들의 지적에 주목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반 장관이 공명정대할 수 있는지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표시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북한의 핵 위기에 대한 반 장관의 지식과 개인적인 이해가 UN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핵실험에 대한 성공/실패 논의

Pinkston 박사는 핵실험이 기술적으로 “성공했는가” 혹은 “실패했는가”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번 핵실험이 기존 핵실험들에 비해 낮은 지진파가 측정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실험은 경험일 뿐이며 그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배움을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목적이 폭발의 규모가 큰 핵실험 성공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실험에서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얻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2006년 7월에 실시한 미사일 발사실험과 마찬가지로이다. 대륙간 탄도급인 대포동(북한명은 백두산)2호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미사일 시스템들은 매우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다. 게다가 그 실험은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하고 북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며 지휘 및 통제구조를 시험함과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미사일시스템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과시하는 기회로 제공되었다.

중동아시아 관련

마지막으로 발표자들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의해 야기되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반향이 아니라 중동 국가들의 반응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란도 역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것은 이 지역에 불안감을 야기하고 핵무기와 핵기술에 대한 요구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핵기술 이전이라는 점에 토론자들은 동의하였다.